

민관협조의 농정펼치길...



정 화 진
(대한양돈협회 부회장)

김주호 장관님의 농림수산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농민의 고정(苦情)을 직접 알아보는 자상함과 관(官)독선이 아닌 민(民)위주의 시책을 펴 나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바 크다

오늘의 농촌경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옛날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그 많은 노동력의 투입에도 보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것은 농촌총각이 장가들기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반해, 농업은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바 참으로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것이 또한 축산업이다.

식량, 특히 육류의 6할을 공급하고 있는 양돈산업의 안정과 국제경쟁력의 강화,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등 정부와 양돈농가가 바라는 바는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정세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정책대응에 있어 양돈농가의 한사람으로 몇가지 김 장관께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월 1회씩 관련업계 대표와의 직접대화

를 요망한다. 업계의 동향, 어려움, 요망사항, 시책협의를 위해 대화해 나가지 않고 관(官)독선의 정책이나 시책으로서 직접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쟁력 배양에 전념하는 생산업자와 사이에 거리감이 있고 불신의 소지가 생겨 농정불신의 싹이 틀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신뢰받는 농정을 위해 대화하고 창조하고 능동적으로 발전코자 하는 농정을 위해 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민관협조의 농정을 이루어 주기 바란다.

둘째, 효과가 별로 없는 관계법의 개정이나 시행령 등의 개정, 혹은 합리적 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흔히 경영이란 예정이 아니고 결과이며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하여 결과와 실재를 중요시한다.

오늘날 양돈분야만 하더라도 30% 미만에만 적용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축산관계법이 있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시행관계로 많은 노력과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과 불신을 받고 있음이 또한 사실이다.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 또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로 협의하고 협조한다면 농촌도 점차 안정되어 농촌총각도 장가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신임 농림수산부 김 장관께서 그 기초를 튼튼히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수출주도정책으로

농축산업 희생하지 말길...

“

그간 농림수산부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축산업을 보호·육성해 왔으나, 경제부처의 심장인 경제기획원의 국가적 경제정책의 목소리에 밀려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성 정 표
(울산·울주지부장)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이 늘면 늘 수록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의 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이때, 신임 이주호 농림수산부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양돈산업의 진진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양돈인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 소망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양돈산업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고 생각된다. 수출주도적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의 상품을 수출하려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 상품을 수입해야 되는 자명한 현실 앞에 그 수입해야 되는 상품의 대부분이 농산물이라는 사실에 양돈을 생업으로 하는 우리들은 정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양돈산업의 발전과정을 보고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고들 하지만, 그간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에 질적인 향상이 따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70년의 소위 비교우위 경제정책의 결과, 무분별한 축산물의 수입으로 급기야는 농촌경제를

파탄의 국면까지 몰고 갔다. 그간 업계의 필사적인 노력과 정부의 협력으로 다소 회복되긴 했으나, 그간의 일관성없는 정부 농정의 실패는 업계의 발전을 다년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또 정부에서는 그간 국가안보적인 차원이란 말을 서슴없이 써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민과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유를 경제라는 잣대로는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농촌은 모든 이의 마음의 고향이요 뿌리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그간 농림수산부는 그래도 농민의 입장에서 서서 농업을 보호·육성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경제부처의 심장인 경제기획원의 국가적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는 높은 목소리에 밀려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건 부인 못할 사실이다. 농업 정책의 이런 불합리한 여건속에 우리의 양돈업은 오랜 기간 돼지가격의 심한 등락에 시달려 왔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두가지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 모든 양돈인들이 어찌면 생업을 파괴할 지도 모를 불황의 그복을 위해 생산조절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모돈의 두수를 통제하고 있으나 종돈장 등록을 필한 농장의 모돈두수에 종돈 생산용모돈은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종돈을 생산하는 전문 종돈장에 종돈 생산용 모돈이 따로 있고 비육돈 생산용 모돈이 따로 있다면, 그 종돈장은 종돈장으로서의 전문성 및 품위를 잃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정말 양돈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내 종돈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생각이면 고능력의 종돈을 공급하는 전문 종돈장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돈 생산용 모돈도 돼지두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국내 유수의 양돈장치고 종돈장 등록을 하지 않는 농장이 몇 개나 되겠는가. 규모가 큰 양돈장은 거의 대부분이 종돈장 등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종돈 생산용 모돈에서 종돈들의 그 물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종돈 생산용모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따로 인정해 준다면 비육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양돈인들은 정말 마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돈계열화 사업이 생산조절에 역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의 실시에 즈음하여 양돈인들 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계열화 사업에 이용되는 자돈 생산용 모돈을 두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계열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마구 쏟아지는 돼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을 조절하여 돈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농촌경제의 안정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이에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모

종돈생산용 모돈도 돼지두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두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양돈을 하는 농장들은 그 규모가 급격히 비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몇 만두씩 기르는 기업양돈장에서 계열화사업을 명분으로 법적 제한 최고두수인 모돈 1,000두를 몇 배 초과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영세농가와 사육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말로 설명은 될 수 있으나, 그건 결국 고기만 주고 고기잡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로도 비유될 수 있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의 양돈장과 자체 사료공장, 육가공공장, 심지어 도축장까지 갖춘 그들은 점점 비대해지고 그들에게 자돈을 공급받아 그들이 주선했 주는 사료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그들이 가져가서 두당 적정 이윤만 사육자에게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그들과 사육계약을 맺고 있는 영세농의 경제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종속되고 말 것이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다!

기업 양돈장들은 수출조건에 맞는 돼지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화 획득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또 영세농가에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어 생산기반의 조성에 협력해 준다면 그들은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신임 김주호 농림수산부 장관은 취임 벽두에 산적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 양돈인들의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서 좋은 농정을 펴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